광주 문화수도 특별법 통과

의미와 전망

국책사업 지속 '법적 근거' 확보

특별회계 설치 문제 해결…재원 마련 쉬워져

11월부터 문화지구 조성 등 실시계획 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종합계획에서 실시계획 수립, 그에 따른 추진 단계별 국가·문광부·광주시 등 주체별 역할을 규정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이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오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물론 2023년 완공 예정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통과 의미=지난 2004년 8월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법령제정 방안 연구가 시작된 이후 만 2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회에 상정된 이후로는 13개월만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와 광주시의 법제안 마련, 시민대토론회, 국회 발의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형평성을 제기한 타 자치단체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문광부 등 정부가 그동안 문화수도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 반대했던 특별회계 설치 문제가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해결, 사업의 재원 마련이 용이해진 점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있어서 광주시의 역할과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특별법은 문화수도 조성사업 종합계획을 문광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은 광주시 주도 아래 집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망과 과제=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문광부는 오는 10월까지 광주시의 사업 계획안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2007년 3월까지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11월부터 핵심문화지구·아시아문화지구 등 7대 문화지구 조성, 문화도시기반 구축·도시문화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또한 문광부의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이 끝나는 2007년 4월 특별법시행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로 문화전당 건립은 물론 문화수도 조성사업도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문광부의 종합계획 수립 이후 광주시가 실시계획 수립 및 집행을 도맡아 해야 하는 만큼 위험성도 상존하게 된다.

특별법 제정으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그러나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 난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가 설치돼도 예비계획에 반영된 국비 2조, 시비 5천억원, 민자 2조5천억원 등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특별법 통과로 인해 국책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내외 민자유치 사업이 가능해져 사업 형태의 다각화는 물론 사업 규모의 확대도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문화산업 육성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화복합단지 건설 계획은 예산 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추진경과

-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법령제정방안 연구 (2004. 8~2005. 4, 한국법제연구원)
- 광주시 법제(1차안) 접수(2005. 1)
- 중간시안 보고 및 시민 공청회 개최(2005.3)
- 쟁점 토론 및 검토 회의 개최(2005.1~4, 10회)
- 최종시안 작성:2005. 4월말~5월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부 본부 실국, 조성위·실무위 의견 수렴:2005. 5~6
- 국회 협의 및 입법화 추진:2005 7월~
- 특별법안 의안 발의 및 제출:2005. 10 -여야의원 157명 서명
- 소관 상임위(문광위)회부:2005. 11
- 특별법안 문광위 공청회 개최:2005. 11
- 문화관광위 상정:2005. 11. 30
- 국회 본회의 통과:2006. 8. 29

박광태 광주시장이 2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을 1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희망연대 정당 밖 정치 현실정치 변수 못될 것"

여야 '평가절하'…고 건 행보엔 촉각

고건 전 총리의 대중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는 '희망연대' 출범과 관련, 정치권은 "당장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으로는 고 전 총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희망연대가 비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현역 정치인이 참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정치적 파괴력이 미약하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9일 여야는 고 전 총리의 희망연대 출범과 관련, 향후 정계개편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을 보였으나 당장 현실 정치에 영향을 줄 '변수'는 못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고 전 총리가 자기 생각을 실현하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정치와) 한 발 떨어진 형태로는 할 일이 많지 않고,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정당이 아닌 정당 밖 정치라는 것은 결국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제대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고 전 총리가 중도실용주의, 실사구시를 표방한 것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보며,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고 전 총리 역시 큰 뜻을 펼치려면 프로 정당, 프로 정치인들과 힘을 합치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재로선 낡은 정치구도를 대체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 전 총리의 꿈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혹평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반응은 우선 희망연대 발기인 가운데 비중 있는 정치인들의 참여가 배제된 데다 고 전 총리가 '희망연대는 신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희망연대가 파괴력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고 전 총리가 향후 정개개편 과정을 봐가며 희망연대와는 별도의 정치조직 결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 전 총리가 정치적 결사체 구성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고 전 총리의 파괴력이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과정 알력 때문에?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2개월만에 교체 배경 관심

전남도 정무라인의 핵심 자리로 5·31 지방선거 이후 '교체설'이 흘러나오던 김영창 종합민원실장이 결국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4급(서기관) 별정공무원이지만 민선 광역단체의 정무직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직급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인사에서 정무라인의 핵심 부서 가운데 하나인 종합민원실장에 김재원(49) 대불대 건설공학부 교수를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그동안 종합민원실장으로서 도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왔던 김영창씨에게는 전남도와 관련된 또 다른 중책을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이번 인사의 배경과 관련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5·31선거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김영창 실장이 지난 6월 8일 종합민원실장에 임명된 지 2개월여만에 전격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전남도청 내에서는 김영창 실장과 함께 5·31선거의 또 다른 공신으로 알려진 김재원 교수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경우 정무라인의 최고위직인 정무부지사가 정무보다는 경제현안에 집중하느라 종합민원실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박 지사의 의중을 반영하는 정무라인의 대변화를 예고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등 43개 법안 의결

2조 1천억원 규모 올 추경예산안도 처리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 43개 계류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국회는 또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주택채권기금 발행한도는 당초 11조5천억원에서 2천500억원 줄어든 11조2천500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 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민방위 업무 관련 책임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30부동대책' 후속입법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시장·군수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전.월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10월 11~30일 국정감사

여야는 29일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인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오는 11월 1일 실시하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같은 달 2~3일 이틀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정부 질문의 경우, 11월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